

당신의 권리를 위한 필독 가이드: 산재보험 이송비 완벽 청구 전략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오고 가는 길은 산재보험이 책임집니다.



‘이송비’란 무엇인가요? 놓치기 쉬운,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산재 치료를 위해 집에서 병원까지, 또는
병원 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할 때 발생한 **모든 교통비**를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9조

핵심 목적 : 산재 근로자의 원활한 요양과 치료
연속성 보장

법적 보호 : 이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으며,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법 제88조).

어떤 경우에 이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최초 및 응급 이송

재해 발생 장소에서 처음
치료받는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전원·진찰·신체감정을 위한 이송

병원 변경(전원), 공단이나 의사의
요구에 따른 진찰,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공단 출석 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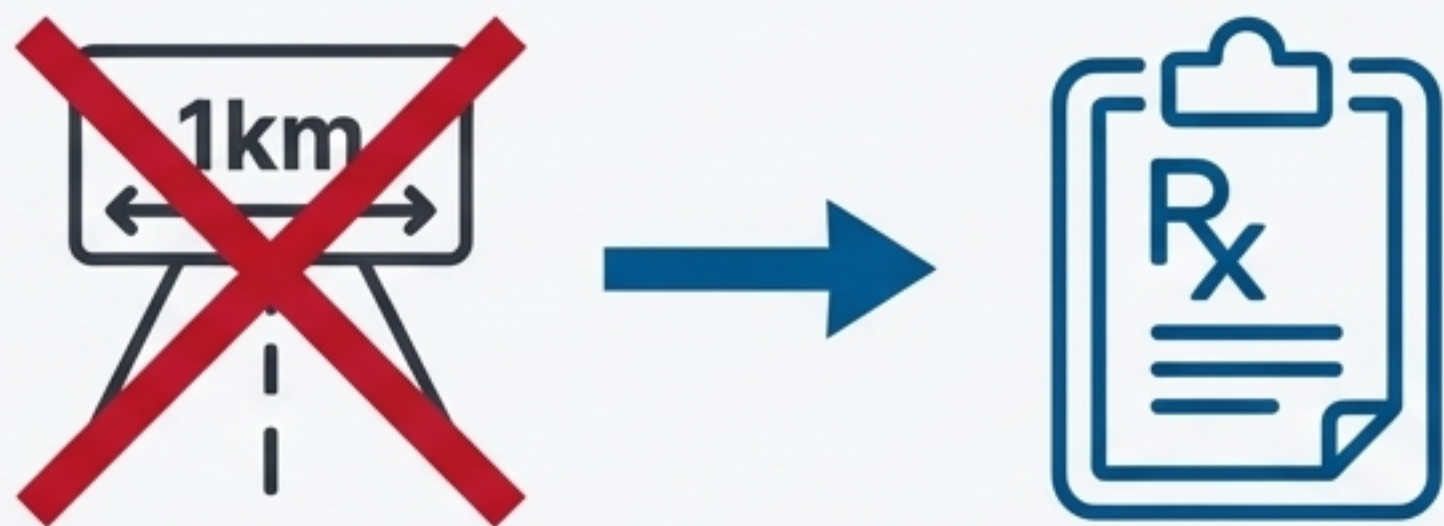
Key Point: 2014년 개정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위한 공단 출석
교통비가 명확히 보장됩니다.



통원 및 퇴원을 위한 이송

치료를 위해 집(또는 직장)과
병원 사이를 오가는
통원 및 퇴원 시 이동

중요한 변화: 1km 거리 제한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편도 1km 이상일 때만 통원 교통비를 지급했지만,
2014년 법 개정으로 **거리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법 개정 전 2년간(2010-2012), 1km 미만이라는 이유로 부지급된 이송비는

500건 **총 6,860만 원**

이제는 당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현재의 핵심 기준

이제 거리(Distance)가 아닌, 근로자의 **'의학적 필요성'**이 유일한 판단 기준입니다.

즉: '상병 상태로 보아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는 통원이 불가능한가?'

청구의 성패를 가르는 황금률: '의학적 필요성'

근로복지공단은 '이 교통수단이 환자 상태에 꼭 필요했는가?'를 가장 먼저 심사합니다.
모든 청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원칙 (The Rule)

이송비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택시 탔어요’라는 주장만으로는
택시비를 전액 받기 어렵습니다.



핵심 전략 (The Strategy)

택시비 전액을 받으려면, 의사의 소견서가 필수입니다.

핵심 문구: 소견서에 **‘환자의 상병 상태로 보아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함’** 또는 **‘거동이 불가하여 구급차 이용이 필수적임’**과 같은 의학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교통수단별 지급 기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교통수단 (Transport)	지급 기준 원칙 (Payment Principle)	핵심 사항
대중교통 (Bus, Subway)	실 소요 금액	영수증이 없어도 이송 경로 내역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택시	실 소요 금액	의학적 필요성 이 담긴 의사 소견서 제출 시 전액 인정 가능. 미제출 시 대중교통 요금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일반 택시 요금에 준하는 금액	주의: 실제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를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은 해당 구간의 통상적인 택시 요금을 기준 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구급차 등 특수차량	실 소요 금액	상병 상태의 위중함에 따라 이용의 적정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보호자도 함께 갈 수 있나요? 동행 간호인 이송비 기준

네, 산재 근로자의 상태에 따라 간호인의 이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 1인 동행

근로자의 상병 상태를 고려하여 이송에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호인 1인**의 이송비가 지급됩니다.



예외: 2인 동행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인까지** 가능합니다.

2인 동행 비용을 청구하려면, 왜 2명이 반드시 필요했는지에 대한 **주치의= 상세한 의학적 소견서**가 필수입니다.

장거리 이동 시 KTX, 숙박비, 식비도 받을 수 있나요?



교통비 (KTX 등)

- **원칙:** 순로(가장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이동 시 실비 지급.
- **등급 기준:** 원칙적으로 **2등급(일반실) 요금** 기준.
- **1등급(특실) 인정:** 상병 상태가 위중하여 1등급 이용이 불가피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가능.



숙박비 및 식비

- **지급 요건:** 이송 과정에서 숙박과 식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
- **지급 기준:** 실비가 아닌 **정액 지급**.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금액을 적용합니다.



주의사항

- **원거리 진료의 합리성 심사:** 거주지 근처에 치료 가능한 병원이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원거리 병원을 선택한 경우, 거주지 근처 병원까지의 이송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 결과가 달라지는 한 곳 차이: 증빙의 중요성

나쁜 예 (Bad Example)

- **상황:** 팔을 다쳤는데, 비가 와서 택시를 타고 통원. 택시 영수증만 제출.
- **공단 심사:** “팔 부상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가 오는 것은 의학적 사유가 아닙니다.”
- **결과:** 택시비 12,000원 중 **버스 기본요금(약 1,500원)만 지급.**

좋은 예 (Good Exa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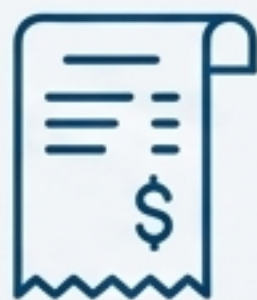
- **상황:** 다리 골절로 거동이 불편해 택시를 타고 통원.
- **제출 서류:** (1) 택시 영수증 + (2) 주치의 소견서 (**‘환자는 다리 골절로 독립 보행이 어려워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함’**)
- **결과:** 택시비 **12,000원 전액 지급.**

이제 직접 청구해봅시다: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1. 요양비 청구서 (별지 제10호 서식)

가장 기본이 되는 신청서입니다.



2. 이송비 내역서 및 영수증

언제, 어디서, 어디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 상세히 기재한 내역서와 지출 증빙 영수증.



3. 의료기관의 통원요양 사실 확인서

해당 날짜에 병원에 방문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4.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서 (필요시)

가장 중요! 택시, 1등급 좌석, 간호인 2인 동행 등 예외적인 비용 청구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 가이드: 요양비 청구서, 이것만은 꼭!

‘청구구분’란에서 ‘이송비’ 항목에 반드시 체크하세요.

‘산출내역’란에 날짜, 구간(출발지-도착지), 교통수단, 금액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요양비 청구서

청구구분	☐ 이송비 ☐ 버전비 ☐ 최로비 ☐ 일등구분 ☐ 가곡구단 ☒ 이송비 ☐ 이정 / 제간비 ☐ 점장			
① 청구구분	② 청구비역원/호			
② 경달하여				
③ 산출내역				
일자	구간(출발지-도착지)	교통수단	금액	합계
			합계 금액	

합계 금액이 영수증 총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Pro Tip:** 청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실전 팁: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받는 법



1. 영수증은 모아서 한 번에 청구하세요.

매번 청구하는 것은 번거롭습니다.
한 달 치를 모으거나 치료가 끝난 뒤
한 번에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모든 영수증은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택시나 구급차 영수증을 분실하면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바로 찍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3. 의사에게 소견서를 요청하는 현명한 방법



‘선생님, 제가 [상병명]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택시를 타야 합니다.
나중에 이송비 청구를 위해 소견서에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
한 줄만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공단은 무엇을 심사하나요? 불승인을 피하는 3가지 기준

근로복지공단은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3가지를 집중적으로 심사합니다.



이송 수단의 적정성

환자의 상병 상태에 비해 과도한 교통수단(예: 경미한 부상에 구급차 이용)을 이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원거리 진료의 합리성

타당한 이유 없이 생활 근거리에서 매우 먼 병원을 선택한 경우, 이송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의 완벽성

특히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하는 소견서가 미흡할 경우, 가장 빈번하게 불승인 사유가 됩니다.

만약 청구가 불승인되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률적 지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방법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 정직한 청구

이송비 청구는 **당신의 권리**이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부정 수급 적발 시

- 징수: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산재보험법」 제84조)
- 처벌: 사안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 가능

당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모든 청구 과정은 반드시 **사실과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